

불장에도 식은 공모시장... 강화된 상장 심사에 IPO '절벽'

신규 상장기업 전년비 55.3% 감소
상장 후 평균 수익률 약 150% 기록
전문가 "IPO 제도 등 정상화해야"

코스피가 8000선을 넘나들고 있지만, 정작 기업공개(IPO) 시장에는 찬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증시의 진입 문턱이 높아진 데다 정부가 '중복 상장 금지' 원칙을 내세우면서 기업들의 신규 상장 계획이 줄줄이 발목 잡혔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 단순한 흥행보다 IPO 제도 정상화를 통한 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한 기업은 1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곳 대비 55.3% (21곳) 감소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은 단 1건이었으며, 나머지 16곳은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자금 조달 규모도 줄었다. IR큐터스에 따르면 올해 상장 기업들의 공모 규모가 1조1327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2095억원 대비 48.7% 줄어들며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급은 줄었지만 시장 수요가 없는 것은



ChatGPT로 생성한 '위축된 기업공개(IPO) 시장' 관련 이미지.

아니다. 상반기 상장기업 17곳 가운데 14곳이 희망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 확정했으며, 이날 기준 상장 이후 평균 수익률도 약 150%를 기록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흐름도 긍정적이다. 올해 상반기 평균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6.32%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26%포인트 증가했다. 기관 배정 물량 중 최소 40%를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40% 우선 배정제도'가 올해 전면 시행된 영향을 풀

이된다.

그렇다면 IPO시장을 통한 자금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 증권가에서는 높아진 한국거래소의 심사 눈높이를 주된 배경으로 꼽는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 IPO가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IPO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000억원에 못 미치는 기업은 신규 상장이 쉽지 않다는 인식까지 생겼다"고 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IPO 담당자는 "거래소 측에서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폭락해 상장 폐지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규 상장뿐 아니라 증시의 상장 유지 조건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중소형 종목이 모여 있는 코스닥의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코스닥의 상장 유지 조건은 시가총액 40억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50억원으로 높아졌다. 2027년에는 200억원, 2028년부터는 300억원까지 올라갈 계획이다. 매출 요건 역시 기존 30억원에서 내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 등으로 점차 상향될 예정이다. 신규 상장의 문턱이 높아진 것도 앞으로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 100억원에 못 미치는 '부실 기업'을 내쫓을 계획인 만큼 애당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의 상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걸림돌이란 지적도 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는 단

기 투기 수요를 자극해 공모주 시장을 장기 투자보다 단기 차익 중심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IPO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내 지수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복 상장 금지' 기조 역시 울려 IPO 건수가 줄어든 핵심 요인이다. 중복 상장 금지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장의 필요성을 따져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IPO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장 폐지 등 시장의 '출구'뿐 아니라 '입구(IPO)'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제도가 시장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장 유지 기준 강화뿐 아니라 신규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 역시 함께 높아져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신규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내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 기술주 조정에도 반도체 담았다

해외주식 Click

SOXL 5억2759만달러 순매수
메모리·레버리지 ETF 등 전반 투자

미국 기술주 조정에도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반도체를 향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장비·메모리 기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최근 조정장을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8일까지 서학개미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테일리 반도체 볼 3배 ETF(SOXL)를 5억 2759만달러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다. 다음으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테일리 MSCI 코리아 볼 3배 ETF(KORU)로 순매수 규모가 9943만달러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학개미들의 투심이 반도체 레버리지 종목인 SOXL에 몰린 모습이다.



ChatGPT로 생성한 '기술주 조정 흐름을 보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이달 들어 7일(현지 시간)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3.66% 급락하며 약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자 서학개미들은 저가매수 타이밍으로 인식하고 더욱 공격적인 베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SOXL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 샌디스크(5286만달러)와 샌디스크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트레이더 2X 롱 샌디스크 데일리 ETF(9823만달러), 글로벌 반도체 장

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7715만달러) 등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에 올랐다. 단순히 반도체 제조사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장비와 메모리, 관련 레버리지 ETF까지 담으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이며, 샌디스크는 낸드플래시 기반 저장장치 기업이다. /신하은 기자

美 규제 역설... 中 반도체 생태계 '재평가'

미래에셋자산운용 온라인 세미나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동반 성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며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처럼 특정 기업의 추격 여부에 주목하기보다 설계부터 장비, 파운드리,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투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TIGER ETF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 타이거'에서 '중국 반도체 시황과 자립 굴기'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희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그동안 중국 반도체는 미국 제재를 받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제재가 오히려 자립을 촉진했고, 그 성과가 기업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주가도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다"며 "이제는 특정 종목이 아니라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애플의 움직임이 중국 반도체 위상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서만 메모리를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애플이 중국 D램 업체 CXMT 메모리 구매를 위해 미국 정부에 규제 승인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반도체 성장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규제 강화가 오히려 국산화를 촉진한 점을 들었다.

정 본부장은 "올해 1~4월 일본산 전공정 장비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24.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 전공정 장비 4개사의 1분기 매출은 27.7% 증가했다"며 "외국산이 빠진 자리를 중국산 장비가 채우는 구조가 밸류체인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대표 파운드리

리 SMIC는 매출의 약 85%를 내수에서 올리는 구조여서 미국 제재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울러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도 성장 동력으로 꼽혔다. 2014년 이후 조성된 반도체 육성기금인 '대기금' 규모가 지방정부 펀드를 포함해 약 161조원에 달한다.

실적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중국 AI 반도체 대표 기업인 캄브리온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9.6% 증가했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SMIC가 점유율 5.3%로 3위에 올라 매출이 16.2% 증가했다. D램 업체 CXMT는 글로벌 점유율이 1년 만에 3%에서 8%로 확대되며 4위권으로 올라섰다.

정 본부장은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투자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중심이라면 중국은 설계(팹리스), 장비, 파운드리, 메모리, 후공정(OSAT)까지 정부 정책과 투자가 동시에 확산되는 구조"라며 "설계 기업이 성장하면 파운드리가 수혜를 받고, 파운드리가 증설하면 장비 업체가 성장하고, 다시 후공정 물량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ETF를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대표 상품으로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이 ETF는 캄브리온과 하이곤(Hygon), 기가바이트 등 팹리스부터 NAURA와 AMEC 등 장비, SMIC와 파운드리, 후공정 기업까지 중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ETF는 지난 6월 기준 최근 1주일 수익률 24.1%, 최근 3개월 100.8%, 연초 이후 98.9%를 기록하며 국내 상장 중국주식형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노령연금 감액, 월 519만원이 기준선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발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하면 연금이 깎일까. 고령층 재취업이 늘면서 '일하는 은퇴자'에게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다. 올해부터는 감액 기준선이 높아져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기준선을 넘는 순간 감액이 시작되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어 은퇴 후 소득 설계가 더 중요해졌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9일

'얼미를 벌 때 연금이 깎이나?'를 주제로 한 THE100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구조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별 감액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줄여 지급하는 제도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

득월액인 'A값'이다.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25%까지 연금이 감액된다. 다만 월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의 50%를 넘을 수 없고, 감액도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감액 기준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곧바로 감액 대상이 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기준이 'A값+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